KAUTM 정기 워크샵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정책방향 (2012~2016)

2012. 1. 11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목차

Ⅰ 수립배경 및 전략적 필요성

Ⅱ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

Ⅲ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Ⅳ 기대효과

Ⅴ 향후 계획

Ⅰ 수립배경 및 전략적 필요성

경제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은
경제·사회의 변혁을
가져온
핵심요인

Google™

- 창립: 1998년 9월
-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 매출: 293억 달러(2010년)

facebook

- 창립: 2004년 2월
-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 매출: 20억 달러(2010년)
  *2011년 1분기 16억 달러 달성

Microsoft®

- 창립: 1975년
- 창립자: 빌 게이츠
- 윈도우 출시: 1983년
- 매출: 625억 달러(2010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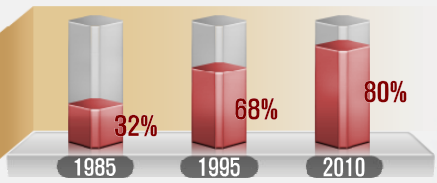
1. 정책환경 변화

21C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 산업사회 ➡ 지식기반사회

-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문화와 기술의 결합 : '창조경제' 로 진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기업 가치에서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비중 급증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율



• 출처 : Ned Davis Research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상

- 무역 분쟁 : 반덤핑 제소 ➡ 지재권 침해 수출입 제한
- 통상 협상 : FTA 등에서 지식재산이 핵심쟁점으로 부각

2. 주요국 정책동향

- 80년대 일본 제조업의 추월
- 무역 연계 지재권 보호 필요

'Pro – IP' 전략 강화

- 지식재산 자원·조직 우선화 법 제정('08)
- 지식재산집행조정관(백악관) 신설('08)

-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 타개책
- 신흥개도국 급성장에 따른 위기감

'知的財産立國' 추진

-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2)
-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03)

- 선진국 대비 지식재산 축적 부족
- 정부주도 국가 전략 필요성 증대

'小康社會' 실현

-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 설치('05)
- 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 수립('08)

3. 범정부 정책의 전략적 필요성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한계 ➡ 지식재산 기반의 질적 성장 시급

* 잠재성장률 추이 :

·출처 : KDI

뛰어난 창의역량에도 불구, 지식재산 관점의 정책 및 관리 미흡

디지털캐스트

- 세계최초로 MP3플레이어 개발

아이러브스쿨

- SNS의 효시

산업사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지식기반사회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국부 창출및 질 높고 지속 가능한고용·창업의 場 마련

Ⅱ 정책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

1. 기본계획 수립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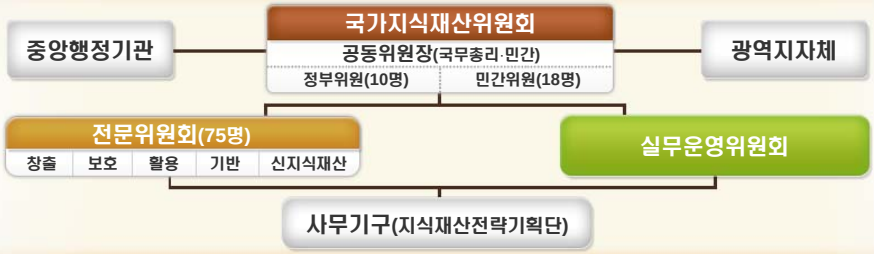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마련 ('09.7)

- 「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설치('09.10)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 시행('11.7.20) 및 기본계획(안) 수립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11.7.28)
- 기본계획(안) 수립 : 민간전문가 워킹그룹, 5개 전문위원회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11.11.20)

정책 추진체계



2. 비전, 정책목표 및 5대 정책방향

비전 2016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5대 정책방향

- 가치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의 **보호** 체계정비
-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 **신지식**재산 보호 · 육성 체계정립

3. 단계별 추진전략

지식재산 창출

1. 연구개발 체제 개선
2. 콘텐츠 등 경쟁력 강화
3. 창조형·개방형 창출 환경 조성
4. 지식재산 관리역량 제고

지식재산 보호

5. 지식재산 심사등록 안정성 제고
6. 지식재산 보호 수준 선진화
7. 해외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8.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지식재산 활용

9.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10.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1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12.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지식재산기반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14.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16. 지역 및 글로벌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

17. 신품종 국가경쟁력 강화
18. 생물자원 보존 활용
19. 전통자원 가치 제고
20.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Ⅲ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과제

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창간 기획-청년 창업, 실패를 허(許)하라

4년 전 세종대 SW 빌 게이츠 극찬했고 한국은 사장시켰다

벤처 창업 등아리 101명 〈중〉3박이 가로 막았다 〈하〉아이디어를 허(許)하라

…발전 없는 한국 … 빌 게이츠 꿈꾸던

"돈 구하기 가장 힘들어" 33%
사업보증 서다 신용불량자 전락
두 차례 창업으로 10억 빚
7년째 학원 강사로 뛰어 갚는 중
공장 하나 세우는 데 서류 70개
그나마도 로비 안 하면 놓아져

공개

부족

도 부족

설비

장지배자 횡포

지재권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신문

2010년 08월 24일 (화)
14면 경제

중소 통신기술업체 A사 대표 김모씨는 7년째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는 2001년 휴대전화 긴급 구조요청 기술을 개발, 특허를 따냈다. 얼마 후 한 대형 통신업체 B사에 이 기술을 납품하기 위해 접촉했다. 하지만 B사는 가타부타 답을 주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이었다. 그러더니 B사는 2004년 A사의 것과 거의 같은 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2007년 대법원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A사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뒤이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1심과 2심 거푸 B사의 손을 들어준 탓이다.

특허분쟁 패소 급증… 중소기업의 눈물

대기업, 신기술 무단복제뒤 "침해 안했다" 오리발
소송하다 가산 탕진… 유출 피해 1년새 12% 늘어

지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는 변호사 비용 50억원을 대느라 5층짜리 사옥을 팔아야 했다. 지난 4월에는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다. 결국 그는 지난달 자사 기술을 미국 HP에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업체 C사는 2008년 11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D사에 슬라이드폰 제조에 쓰이는 스프링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2005년 특허를 받은 이 기술을 D사에 제공하며 상품화를 기다리던 C사는 1년6개월 뒤 D사가 다른 업체에 생산을 맡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C사 대표는 "D사가 우리에게 제품 가격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 기술을 무단 복제해 특허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D사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승리해 권리를 찾을 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처리건수 중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은 2005년 42.5%에서 2007년 33.8%, 2009년 27.1%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2007~2009년 기술 유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10억 2000만원(연 매출의 9%)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중소기업들이 밝히는 대기업들의 횡포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설계도나 자료를 요구한 뒤 미흡하다고 퇴짜를 놓았다가 얼마 후 비슷한 기술을 시중에 내놓는 수법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에서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고 불량 처리를 하면서 다른 업체에 기술을 주고 제품을 만들게 하는 수법이다.

중소·벤처업체는 기술을 상품화하려면 대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업체는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로열티를 줄 때도 매출액이 아닌 순이익의 2~3%를 준다고 하거나 몇개월 주다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를 끊자고 할 뿐 아니라 업계에 소문이 나면 다른 기업의 주문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벤처기업 대표는 "대기업이 특허심판을 걸어 시간끌기에 나서거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중소기업에는 덫이 된다."면서 "시의성이 관건인 첨단기술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로열티를 받을 시간도 짧아져 결국 기술을 헐값에 넘기게 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특허심판에서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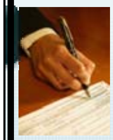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년
42.5	46.7	33.8	42.4	27.1

(자료: 특허심판원)

올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접수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상담 건수는 279건으로 지난해(43건)의 6배가 넘는다. 그러나 피해를 겪고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김문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차장은 "실제로 자문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 피해를 겪은 기업이지만 신고나 법률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 대개 거절한다."면서 "거래기업을 밝히면 영업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기술 유출 및 산업보안 관련 수사인력 양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구성 ▲상담·법률비용 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승완 네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미국, 일본 등은 특허권 도용에 대한 제재가 강하고 권리자 편을 들어주는 판례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해 주고도 특허심판에서 무효화시키고 소송하면 지게 만드는 등 권리 보호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1. 지식재산 창출

전략목표 ① ***연구개발 체제 개선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 특허 출원은 세계 4위, 지재권 적자 58억달러
- 표준 특허 등 강한 지재권 확보 필요

→

-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전략목표 ② ***콘텐츠, 브랜드·디자인 및 SW 창출 경쟁력 강화***

- 콘텐츠 세계 시장점유율 2.2%에 불과
- 기획력 부족, 핵심기술 해외 의존

→

- 차세대 콘텐츠 및 SW 창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전략목표 ③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 창의성 높은 연구성과 미흡
- 산학연 공동연구 지식재산 창출 감소

→

-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 활용 촉진

전략목표 ④ ***대학·공공(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 창의 잠재력에 비해 지식재산 관리 미흡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지식재산 격차 심화

→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 세계 일류 지식기반형 기업 육성

2. 지식재산 보호

전략목표 ⑤ *지식재산 심사·등록의 안정성 제고*

- 신속한 산재권 심사처리 요구 증대
- 저작권 허위등록으로 시장 혼란

→
- 산재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성 제고

전략목표 ⑥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 온라인 상 지식재산 침해 심각
- 수사 전문인력 역량 양적·질적 미흡

→
- 지재권 침해물품 불법유통 방지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전략목표 ⑦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해외에서 우리 지식재산 침해 증가
-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기능 미흡

→
-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 침해 대응 현지 지원체계 구축

전략목표 ⑧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정비*

- 손해배상 미흡·소송 장기화 등 기업 부담
- 조정·중재 제도 활용 미흡

→
- 지재권 소송 실효성, 신속성·전문성 확보
-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3. 지식재산 활용

전략목표 ⑨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

- 연구 현장의 수익화 활동 저조
- 공공·공유 지식재산 정보의 낮은 가용성

→ 연구성과 확산체계 선진화 및 사업화 지원
→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전략목표 ⑩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지식재산이 독립적 수익창출 수단으로 대두
- 기술금융 등 자생적 자금유입 부족

→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 가치평가 시장 및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목표 ⑪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 국내 시장은 영세하고 서비스 역량 미흡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지식재산 경영 지원 서비스 활성화

전략목표 ⑫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지속 증가
- 지재권 남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부족

→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 불공정한 권리남용 대응 강화

4. 지식재산 기반

전략목표 13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 지식재산 존중의식 및 보상 미흡
- 지식재산 양극화(IP Divide) 우려

→
- 지식재산 존중문화 및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제고

전략목표 14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 지식재산 인력 양성 중장기 전략 필요
- 전주기적 지식재산 교육 중요성 증대

→
- 지식재산 인력 양성기반 강화
- 지식재산 창출 인재 및 지원 인력 양성

전략목표 15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족
- 관련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 미흡

→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전략목표 16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국제규범 및 협력 중요성 증대
- 지자체의 지식재산 인프라 취약

→
-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5. 신지식재산

전략목표 17 *신품종 지식재산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종자수입 관련 로열티 지출 증가
- 국제적 침해분쟁 증가 추세

→
-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및 실효성 강화

전략목표 18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 다양성·규모에서 선진국과 큰 격차
- 정보화 미흡 등으로 활용도 저조

→
- 생물자원 발굴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생물자원 활용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강화

전략목표 19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DB 구축·활용 및 산업화 초기 단계
- 국제적 논의는 증가, 국가별 입장은 상이

→
- 전통자원 발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화 촉진
- 전통자원 관련 국제대응 및 제도개선

전략목표 20 *유망 신지식재산 지원 강화 및 제도 마련*

- 지리적 표시, 비전형 상표, 퍼블리시티권 등
- 새로운 지식재산의 경제가치 부각

→
- 식별표지의 창출 지원 및 활용 강화
-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 기반 구축

신품종 육종
지리적표시제(고려 홍삼)
퍼블리시티권
신품종 종자수출액
25백만달러
70백만달러
2010
2016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155천톤
536천톤
2010
2016

Ⅳ
기대효과

기대효과

재정투자 추정액 : 총 10조 1,500억원('12~'16, 연평균 2조 300억원)

	재정투자	주요 기대효과
창출	7조 5,600억원	표준특허 확보비율 3.1% ('10) → 5.0% ('16)
보호	4,100억원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19.2%('10) → 15.0%('16)
활용	9,600억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 1.48% ('10) → 3.4% ('16)
기반	3,100억원	지식재산 연구인력 29,000명('10) → 100,000명('16)
신지식재산	9,000억원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 5,141건 ('10) → 8,962건 ('16)
재정투자 주요사업	차세대 콘텐츠·SW 발굴·개발(1조 8,700억원), 기술사업화 등 전문기업 육성(5,800억원),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2,700억원), 신품종·생물자원 발굴 지원(4,100억원) 등	

Ⅴ 향후 계획

향후 계획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정책방향에 따라 '12년도 국가 시행계획 마련
- 2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자체 추진계획 종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의·의결('12.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 평가

-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재원배분방향 수립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연계, 관계기관에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

국내외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기업 등 경제 주체별 수요에 부응하여
"살아있는 정책" 운용이 되도록 만전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감사합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